

# 영광 해상풍력, 수협 과보상 요구·행정 방관 '좌초' 위기

17개 발전사 11GW 규모 사업 추진 수협, 배 1척당 5천만원 고수로 발목 郡, 가짜 어민·유령 선박 정리 등 외면 사업 지연·군민 기본소득 추진 불투명

지역 주민과 경제에 혼풍을 가져다 줄 영광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9일 영광군 등에 따르면 17개 발전사업자가 영광 해역 일원에 전국 최대 규모인 11GW급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중 8개 업체가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수협의 과도한 보상금 요구와 행정 당국의 방관에 발목

이 잡히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될 상황이다. 군은 해상풍력 이익공유제를 통한 '군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지만, 주민 수용성 등의 권한을 쥐고있는 수협이 "5조원 사업에서 500억원 보상은 상식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사업이 제대로 오르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전 단계로 이해당사자(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 해당 권한을 앞세운 영광군수협이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사업자와의 협상이 중단됐다. 갈등의 핵심은 조업 실적이 전혀 없는 이른바 '유령 어선'들에 대한 무리한 보상 요구다. 통상적으로 해상풍력 사업자는 객관적인 어업 피해 조사 용역을 거쳐 실질적으로 조업하는

어민들에게 피해 규모에 맞는 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한다. 그러나 수협 측은 이와 별개로 배 소유자를 대상으로 선박 1척당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보상할 것을 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수협 관계자는 "안마 해상풍력의 경우 여의도 면적의 30%에 달하는 2천500만평의 어장이 사라져 어민들이 생계를 잃게 된다"며 "가령 배 1천척에 5천만원씩을 준다고 해도 총 500억원이다. 5조원짜리 사업에서 1%에 불과한 금액인데, 그 정도의 대책이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상식에 어긋나느냐"고 항변했다. 이 같은 상황의 이면에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의 특혜를 노린 꼼수가 숨어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업자로부터 어업 보상금을 받아내 '피해 어업인'으로 인정받게 되면,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투자 권한 중 일반 군민(투자 한도 1천만원)보다 4배나 많은 4천만원(세대당 최대 8천만원)의 투자 권한을 얻어 매년 수백만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협과 사업자 간의 견제차로 인해 해상풍력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허가권을 가진 영광군이 갈등을 중재할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방관하고 있어 '행정 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군은 대외적으로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 홍보에만 치중할 뿐 실태조사팀 영진 보상 문제에는 "민간 사업자와 수협 간 문제라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행정 관청이 특정 단체에 보상금을 얼마 주라고 강제하거나 지정할 법적 권한은 없다"며 "과거 전임자 시절부터 수협을 권리자로 보고 인허가를 진행해 온 터라 이제 와서 권리자 지위를 철회하기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양측이 원만하게 절충안을 찾아 협의해 주길 바랄 뿐 직접 개입하기는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지역 주민들은 "영광군은 뒷집만 진 채 수협 핑계를 대고, 수협은 어민 생존권을 방패 삼아 사업비의 1%를 운운하며 뽀니를 부리는 형국"이라며 "결국 행정 당국이 명확한 보상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세워 개입하지 않으면 지역 경제를 살릴 해상풍력 사업은 공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성학기자



"깨끗하게 봄 맞이해요" 9일 광주 북구 건국동 용산교 인근 불법 쓰레기 투기 취약지에서 동행정복지센터 직원, 영산강어메니티 봉사단들이 새봄을 맞아 도심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영권기자

## '보조금 횡령' 오일단체 前 임원진들 내주 첫 재판

보훈부 감사 후 수사...8명 기소돼 국가보훈부 감사로 국가보조금 횡령 사실이 드러난 오일 공법단체 전직 임원 등에 대한 재판이 기소 8개월여 만인 다음 주에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보조금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18민주화운동 부상·공로자회 전직 회장 2명 등 총 8명에 대한 첫 재판을 오는 19일 열 예정이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2023년 10월 4일부터 약 한 달간 부상자·공로자회를 상대로 수의 사업 및 국고 보조금 회계 실태를 살펴보는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부상자회와 공로자회 모두 인건비 용도로 받은 보조금을 허위 근로자를 등재하며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편취 금액은 부상자회 3천400여만원, 공로자회 약 800만원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부상자회 전직 간부 A씨의 지원

노트북 횡령, 명절 기념품 리베이트 등 의혹이 불거져 보훈부는 적발 내용을 광주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후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은 보훈부의 감사 내용 상당 부분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이와 관련,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어 "보훈부 감사 결과로 수사 의뢰돼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사법부가 정의를 엄정한 판단을 내려 주길 바란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판결로 오일 정신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안재영기자

## '선거법 위반' 정준호 의원 1심 8월 결론날 듯

6월 증인 신문 후 7월 결심 예정 '재기소 위법' 위헌법률심판 변수 한 차례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1심 결론이 오는 8월 중 나올 전망이다. 광주지법 형사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재판을 재개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달 법관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 이변경된 데 따른 갱신 절차를 밟기 위해 열렸다. 검찰의 공소 사실과 정 의원 측의 변론 요지를 들은 재판부는 오는 6월까지 증인 신문 등을 이어가고 7월에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에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선고 공판은 8월

중 열릴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 의원 측이 검찰의 재기소가 위법하다는 취지에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정이 받아들여진다면 재판 일정은 바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의원은 그의 선거 캠프 관계자 2명과 함께 4·10 총선을 앞두고 수당을 받는 홍보원 10여명을 고용해 전화를 돌리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정 의원 본인은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그러나 유·무죄 판단 전 광주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기소까지 했다는 문제점이 드러나 지난해 2월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광주지검이 같은 혐의로 재기소하면서 정 의원은 4·10 총선이 2년 가까이 되는 현재까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안재영기자

## '위조 이용권' 판매 사우나 직원 2심도 실형

사우나 이용권을 위조해 수천만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유가증권위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은 A(40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3월 공법 B씨와 함께 광주 사우나 이용권 1만4천장을 위조해서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우나 이용권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유사한 재산적 가치가 있어 유가증권으로 분류된다. 사우나 직원이었다면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약 6천400만원을 벌어들였다. 경찰은 이용권 사용 고객이 급증한 것을 이상하게 여겨 사우나 측의 신고로 이변 수사에 착수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생필비를 받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위조한 유가증권 수량이 상당하고 액수도 크다"며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완전한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한 원심의 형량은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재영기자

## 실내파크골프장 이용안내 (전국80개) 유명구장

● 18홀 (1회/이용료8천원) ● 10회권/6만 ● 20회권/10만

<b>1:1 교육</b>	<b>★왕초보 레슨반</b>	기본자세, 공치기, 경기방법	1주완성/6만
	<b>★구장 실전체험</b>	80개 스크린구장/경기체험	초보,자격취득과정
	<b>자격증 취득반</b>	파크골프,지도사2급 파크골프,지도사1급 파크골프,심판/강사1급	▶ 2급/28만 ▶ 1급/35만 ▶ 심판/10만

**■ 자격취득반/수시접수** ▶ 자격취득까지 추가비용 일체없음  
 (응시료+교재비+이론교육(영상)+실내실습(자격취득시까지 무료))  
 \* 자격취득 즉시 스크린파크장 무료이용권 10장 제공 / 합격축하 기념

**티샷·퍼팅샷·어프로치샷/개인연습/이용자10분 무료**

안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방향